

“함께 살기 위해 함께 멈춘다” ...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금속노조 완성차·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 자동차 생산 멈춘다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노동자들이 완성차 자본을 압박하기 위해 공동파업에 나선다. 20일 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생산을 멈추고, 21일에는 완성차 노동자가 파업을 이어간다.

금속노조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부품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법 제도화를 세 가지 공동 요구로 내걸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모듈·직서열 부품사 등을 상대로 2027년까지 최대 20%의 원가 절감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완성차가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동안 그 비용과 위험을 하위 부품사에 떠넘기는 구조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이대로라면 국내 부품산업의 기반은 무너지고 해외 부품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번 무너진 국가의 제조 기반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 부품사 노동자들

이 생산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가만이 아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막혀 있다.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은 2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0%가 현대차그룹 소속이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은 “현대자동차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상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성차 노동자들은 산업 전환과 자동화·로봇 도입 속에서 숙련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성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정년을 맞아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차가 막대한 이익을 쌓고도 노동자에게 성과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저임금 임시직 형태의 숙련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 없는 온전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동파업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문에서 “완성차 부문이 최대 실적을 이어가

는 동안 구조 전환의 비용과 부담은 부품사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투쟁을 “단순한 임단협을 넘어 재벌 자본의 공급망 재편 및 원·하청 불공정 구조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으로 규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노동자간 격차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운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라며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정의로운 선언”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금속노조는 기아차지부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전체 파업 규모는 약 8만~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생산 차질 대수나 손실 규모는 파업이 시작되기 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이나 손실액 자체보다 “완성차 생산라인이 이를 연속 멈춘다는 점”에 이번 공동파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일 공동파업 이후 추가 투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와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이 없을 경우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추가 파업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26일에도 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이번 산별 공동투쟁을 통해 부품사 보호와 원청교섭,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원청교섭의 길, 제대로 닦아라

금속노조, 19일 전국 지역 노동청 앞 기자회견...

원청교섭 성실 이행 및 정부 역할 촉구

금속노조가 재벌·대기업의 거부로 제자리걸음인 원청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활성화 및 정부 역할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조합원만 2만 명이 넘는다. 개정 노조법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교섭은 여전히 꽉 막힌 상황이다. 각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아도 원청 자본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오션, 동희오토는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는 교섭을 열기도 전에 의제를 축소해야 한다며 교섭 개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부정하고, 개정 노조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부당

노동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당국은 수사 등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손을 놓고 있어 하청 노동자의 피해는 커져만 간다. 정부의 방관은 원청 자본이 끝까지 교섭을 거부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정부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불법을 앞세워 원청교섭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원청교섭의 실질적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하청노동자들 눈에는 노동부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정당해도 일정 규모 이상 제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김태훈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법이 바뀌면,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현장을 바꿔 갈 수 있을 줄 알았다”라고 탄식했다. 이어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바로 원청”이고, “하청업체에 임금채불이 만연”하다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모호한 ‘행정해석’을 내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이 합법적으로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정상이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노동자들은 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무려 20여 년 넘게 요구했다”라며, “여전히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교섭 거부로 무력화되고 짓밟히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같은 악질 사용자들을 당장 구속하라. 우리 노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원청교섭 집단 지연 국면에 각 지역 노동청이 적극적 행정 조치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원청교섭 촉진 역할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대자본 투쟁은 물론이고 올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대전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남·통영·울산·서산 등 전국 9개 지역 노동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지청장 면담 등 항의행동에 나섰다.